

古典的 經濟統合理論의 批判的 考察*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의 남북한적용에 대한 비판—

金 瑩 允**

< 目 次 >

- I. 序論：問題提起
- II. 經濟統合의 概念과 形態
- III. 古典的 經濟統合理論의 核心과 批判
- IV. 經濟統合理論의 南北韓適用
- V. 經濟統合理論의 새로운 接近
- VI. 結論：南北韓 經濟統合과 經濟地域形成

I. 序 論：問題提起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경제통합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를 수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교류를 심화·발전시킬 경우 완전한 經濟統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이질 체제인 남북한의 통합에 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金世源¹⁾은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거래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해 우선 제한적 자유무역지역을 실현시키고, 남북한간 調整 및 接近을 提高시켜 공동시장을 창설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經濟同盟을 체결하여 경제적 통일

* 1995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1996. 2. 14)

**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長

1) 김세원, “남북합의서의 남북간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실천과제”,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1회 통일학술세미나「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와 실천적 과제」(1992), p. 24.

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李鍾元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핵심적 과제²⁾로 먼저 基本條約을 체결하여 각종 直·間接 交流를 증진시키고 남북한간의 自由貿易과 關稅同盟을 체결한 후, 장기적 과제로서 共同市場을 형성하는 것을 들고 있다. 공동시장은 직·간접교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① 상품시장의 완전개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② 경제동맹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구조 및 제도의 재조정과 ③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擴充을 도모하는 단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 남북한은 貨幣同盟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한 경제통합 단계인 「민족경제공동체」를 달성하고 정치적인 統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李相萬의 경우는 남한의 통일정책과 부합되는 경제통합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³⁾ 그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間接交易→直接交易→經濟協力→經濟統合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체제는 상호 收斂過程을 거쳐 단일화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즉 북한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로 전환되고 화폐단일화와 함께 경쟁원리에 기초한 가격메카니즘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통화제도의 자본주의적 개혁, 남한세제에 기초한 예산제도의 도입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經濟改革 조치들이 체제수렴과정에서 추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⁴⁾

그는 경제통합과정을 우선 남북간 직·간접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交流期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經濟協力期로 상정하고 경제협력단계에서 남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한 지원협력, 자본과 기술협력, 산업협력 및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교류·협력기를 거친 후 남북간에는 自由貿易地域이 실현되고 역의 국

2) 李鍾元, “統一에 對備한 韓國經濟의 進路模索”, 成均館大學校 韓國產業研究所, 『한국경제』 제21권 제1호 1994. 9, pp. 97~100.

3) 이상만은 많은 논문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통합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논문만을 언급한다.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남북한 경제교류 실천방안”,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통권 제13호) 1992년 봄,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1,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1991. 12, 통일원.

4)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p. 190.

가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채택하는 關稅同盟과 共同市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 공동시장 형성후 남북한은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經濟同盟을 거쳐, 단일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通貨統合(통화동맹)의 단계를 거쳐 노동관계, 사회보장제도가 통합되는 社會統合(사회동맹)을 이루는 완전한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상만의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은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구	분	단	계	내	용
여 건 조 성 기	경 제 교 류 기	1. 간접교역단계		○ 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 ○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2. 직접교역단계		○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교류 ○ 후기 :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경 제 협 력 기	1. 상호편의제공 단계		○ 수출입업무 대행등 외화획득 지원	
		2. 산업협력 단계		○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제 형성	
		3. 합작사업 단계		○ 초기 : 상단기 신용차관 제공 ○ 후기 : 경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4. 공동사업 단계		○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공동건설, 공동이용	
통 합 기	공 동 시 장 형 성 기 남 북 연 합 기	1. 부분별 경제통합		○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 선정(예 : 철강, 석탄)	
		2. 자유무역 지역형성		○ 관세 철폐, 무역제한 철폐	
		3. 관세동맹		○ 공동관세 정책	
		4. 남북한 공동시장		○ 시장상호 개방 ○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 제 통 합 기	5. 경제동맹		○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6. 통화동맹		○ 단일통화창출 ○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 경제정책 통일	
		7. 사회동맹		○ 노동관계 통합 ○ 사회보장제도 통합	

출처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 통일원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서울 : 통일원 1991), pp. 209~210.

5) 이상만, 앞의 논문, p. 208.

위에서 언급한 경제통합과정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이 대부분 후술하는 발라사(Balassa)식 경제통합단계 이론을 원용한 自由貿易地帶→關稅同盟→共同市場→貨幣・經濟同盟→經濟統合→政治統合의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시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취할 경우, 경제통합이 무리없이 이룰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형성시키는 기능적(functional) 요소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요약하면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경제체제와 經濟水準의 이질성에 관계없이 유럽연합(EU)의 국가들과 같이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에도 수많은 장애에 부딪혀 그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큰 어려움없이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또한 關稅同盟이 형성되기 전에 自由貿易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데 자유무역이 과연 아무런 제약없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룩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적인 통합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고에 基礎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적용되는 기존의 경제통합이론이 어떠한 理念과 背景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제통합이 실제 경제통합이론과 상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통합이론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부적합할 경우,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서 南北韓의 경제통합에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방법적 접근의 當爲性과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임을 첨언한다.

II. 經濟統合의 概念과 形態

1. 經濟統合의 概念

經濟統合(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 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간 差別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共同經濟單位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Balassa는 경제통합을 경제통합의 대상이 되는 국가 상호간의 내부 結束度와 이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 정도에 따라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 關稅同盟(Customs Union), 共同市場(Common Market), 貨幣 및 經濟同盟(Monetary & Economic Union) 및 完全한 統合(Complete Integration)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⁷⁾

자유무역지대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함으로써 域內 자유무역을 보장하나, 域外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域外共同關稅(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지칭한다. 즉, 가맹국 상호간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나 域外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의 형태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가맹국 상호간 財貨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

6) 경제공동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경제공동체를 경제통합의 개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Andreas Predöhl, "Europäische Integration", in HDSW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en*) (Göttingen: 1961), p. 371; 孫炳海, 『經濟統合論:理論과 實際』(서울: 법문사, 1990), pp. 5~6 참조.

7)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Fourth Impression, 1973), p. 1. 발라사는 경제공동체를 하나의 과정(process)인 동시에 하나의 상태(state)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공동체형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각 국가별로 다르게 속해 있는 경제단위(economic units)간의 활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제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공동체형성을 하나의 상태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각 국민경제 상호간 경제활동과 관련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다.

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제통합체다.

화폐 및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을 더욱더 발전시킨 경제통합 형태로서 역내 상품 및 生産要素의 자유이동과 역외공통관세 외에도 각 加盟國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져 공동 경제정책이 수행되는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통합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 형태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합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국은 사실상 하나의 단일경제로 統合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통화정책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유의 경제적 주권이 초국가적인 기구로 移讓되어야 한다. Balassa는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통합을 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2. 經濟統合의 形態

경제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제도적 형태에 따라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急進的인 경제통합과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과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漸進的인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형별로 制度的 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과 機能的 統合(functional integration)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적 통합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경제 주체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경제통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기능적 통합은 제도적인 통합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산업 전후방 聯關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부분에서 국가간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통합형태를 말한다. 기능적 통합의 예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간의 경제적인 결합을 들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행하는 교역량은 지금까지 오스트리아가 속해 있는 경제통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域內 모든 국가와의 교역량보다 훨씬 많다.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경제통

합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으로는 독일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경제통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古典的 經濟統合理論의 核心과 批判

1. 經濟統合의 理論的 核心과 背景

경제통합이론의 핵심은 와이너(Viner)⁸⁾, 미이드(Meade)⁹⁾ 등에 의해 분석된 관세동맹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비록 경제통합의 형태가 각각 상이하더라도 가맹국과 비가맹국을 구별하는 중요 수단이 관세에 의한 무역차별화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통합 효과는 근본적으로 관세동맹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경제통합 형태는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 즉, 自由貿易과 保護貿易이라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을 연결시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은 리카아도(D. Ricardo)의 比較優位에 입각한 자유무역¹⁰⁾을 통해 세계 전체 자원의 最適配分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총국민소득과 후생의 극대화를 꾀하여야 하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유무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지역이나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즉, 동맹에 가담한 국가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원의 최적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호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국가의 厚生을 극대화시키자는 논리다.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역내관세가 철폐되면 가맹국 상호간의 수입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높은 生産費로 생산했던 국가는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해지며 그 대신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국가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生産特化(specialization)현상이 나타나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와이너는 이것을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on effect)라고 하고 있

8)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London: Stevens & Sons, 1950).

9) J. E. Mead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55).

10) 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ondon, First Publication, 1817).

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역외의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관세를 취하므로 무역거래량은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동맹이 결성되면 加盟國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나, 域外國家에 대해서는 공동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역내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보다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비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은 동맹내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즉, 생산물의 供給源이 저생산비의 비가맹국에서 고생산비의 역내 가맹국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와이너는 이를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sion effect)라고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 결성으로 역내무역은 증가하나, 그 무역확대는 역외의 최저생산비 공급원이 희생되고, 역내의 고생산비 공급원이 동맹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전환효과는 세계자원의 最適配分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¹¹⁾

이상의 설명을 수치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세계에는 A, B, C 3개국만 존재하며 이들 3개국의 X재 생산비가 아래의 표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가정한다.¹²⁾

〈표 2〉 관세동맹 결성에 따른 가격 변화

	A 國	B 國	C 國
生産費	\$180	\$130	\$100
A國이 輸入하는 關稅 포함 價格	\$180	\$230	\$200
A B國 關稅同盟 체결후 價格	\$130	\$130	\$200

현재 A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X재에 대해 단위당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X재 소비는 국내생산에만 의존하게 될 뿐, B국이나 C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국이 B국 및 C국으로부터 수입하는 X재의 가격은 230달러 및 200달러로 A국의 국내가격 180달러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만약 A국과 B국이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C국에 대해 제품 단위당 100달러의

11)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M. Borchert, Au enwirtschaftslehre · Theorie und Politik, 3ed. (Wiesbaden: Gabler 1987) p. 310~314 참조.

12) 생산비는 절대생산비가 아니고 상대적 생산비로서 각국내 사회적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관세를 부과한다면, A국은 B국으로부터 X재를 \$130에 수입할 수 있으므로 A국의 X재 생산은 중지될 것이다. 높은 비용의 국내생산이 보다 낮은 비용의 B국 생산으로 대체됨과 동시에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가장 낮은 비용의 C국 생산이 이보다도 높은 비용의 B국 생산으로 대체됨으로써 C국으로부터 가장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던 교역 흐름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세계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역내무역은 증가하나, 이는 역외 최저생산비 공급원이 희생되고, 역내의 고생산비 공급원이 동맹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관세동맹으로부터 A국의 후생이 증가하려면 이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비효과면에서도 A국과 B국간 관세동맹이 형성될 경우,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A국의 X재가격은 \$180에서 \$130 인하된다. A국 국민들의 X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않는 한 A국 국민들의 X재 소비는 관세동맹 이전보다 증대될 것이다.

關稅同盟은 위와 같이 상호 모순된 두 개념 즉,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외국가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차별화의 양측면 가운데 前者를 통한 효과에 더 중점을 두어 고찰하고 있으며, 前者의 효과가 後者보다 더 클 경우 이론적 타당성이 성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2國이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쌍방은 서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동맹은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효과가 제3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얻는 負의 효과보다 더 클 경우 그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 經濟統合理論의 批判

(1) 理論的 批判

위에서 언급한 關稅同盟理論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관세동맹이론은 Ricardo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역내국가간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比較優位理論(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은 무역이 일어나는 원인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세계는 2국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단지 2財貨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생산비면에서 어떤 1국(A)이 兩財貨에 있어서 비록 절대적인 劣位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재화간의 생산비면에서 다른 1국(B)에 비해 優位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를 A국이 特化(specialization)해서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는 교역상대국(B)이 특화하여 이를 수입할 경우 상호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헤셔-올린(Heckscher-Ohlin)에 의하면 비교우위는 각국 생산요소 賦存量の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 즉, 상이한 생산물간에는 要素集約度の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 그러나 비교우위이론은 다음과 같은 제약 즉, ① 2국 2재화에 국한시킨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②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며 ③ 불변비용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그 밖에도 ④ 양국 생산요소의 동질성 ⑤ 완전고용 상태의 유지 ⑥ 생산요소의 대체 불가능 ⑦ 수송비 및 관세 무시 ⑧ 생산물의 자유이동과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이론은 무엇보다도 정체적인(static) 이론이라는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¹⁴⁾

따라서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비로소 이론적 성립이 가능한 관세동맹이론은 그 자체로서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세동맹이론 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전제, 예를 들어 생산의 供給彈力性이 무한대이며 재화의 품질은 어느 국가라도 동일하다는 점이나 재화의 需要 또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셋째, 관세동맹이 통한 세계자원의 배분면에서 나타나는 純效果는 貿易創出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증대가 貿易轉換으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를 능가하여야만 가능한데, 多國 多品種財貨가 거래되는 실제 교역상에 있어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13) E. Heckscher,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L. A. Metzker, ed.,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hiladelphia 1949); B. Ohlin,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Economic Studies*, Vol. 39 (Cambridge 1967).

14) Alfons Lemper, *Handel in einer dynamischen Weltwirtschaft* (Weltforum Verlag, München: 1974), pp. 15~44. ; Dieter Senghaas, *Weltwirtschaftsordnung und Entwicklungspolitik: Plädoyer für Dissoziation* (edition suhrkamp: 1977), pp. 75~87.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총효과가 긍정적인 것이 되기 위한 관세동맹을 어떤 국가들과 결성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관세동맹의 효과는 관세가 부과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다섯째,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얻는 순효과가 증가한다 해도 역외 비동맹국가들의 무역축소로 인한 負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동맹으로 인한 범세계적인 厚生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섯째, 관세동맹이론은 이에 참가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가국 전체의 厚生增大에 과연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관세동맹에 의한 경제통합은 관세부과 有無에 의해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라도 Ricardo의 比較優位理論에 입각한 역내국가간의 自由貿易을 실시할 수 있다면,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쌍방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경제수준과 체제가 현격히 다른 국가간이라도, 예를 들어 미국과 쿠바 사이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하나의 경제통합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그것이 관세동맹 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와이너의 관세동맹이론에 입각한 경제통합이 이에 참가하고 있는 개별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창설된 지 많은 시간이 경과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967년 창설) 국가들은 지금까지 왜 自由貿易地帶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韓國과 日本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동맹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說明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을 이루어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미국과 유럽공동체나 미·일본간의 무역전쟁에 가까운 분쟁은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高度의 競爭力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공동시장을 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유럽연합의 존립마저 위험시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自由貿易主義의 투철한 신봉자인 하벌러(Haberler)¹⁵⁾나 뢰프케(Röpke)¹⁶⁾도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¹⁷⁾

關稅同盟理論은 다국적이며 다원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본질은 규명되지 않은 채, 경제통합의 효과만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이나 조치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2) 經驗的 批判

경제통합을 이룬 사례로서는 미국의 연방통합과정이나 독일의 관세동맹, 동서독의 경제통합을 들 수 있으며, EU, NAFTA, ASEAN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현재 경제통합이 진행중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사례의 구체적인 경제통합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¹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통합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15) G. Haberler, "Defects in the Concept of Regionalism to Solve Trading Problems", *Indian Journal of Economics* (July 1957); *Der internationale Handel: Theorie der weltwirtschaftlichen Zusammenhänge sowie Darstellung und Analyse der Aussenhandelspolitik*, (Berlin / Heidelberg / New York 1970).
- 16) W. Röpke, "Integration und Disintegration", in E. Beckerath, /F. E. Meyer /A. Müller-Armack(Ed.), *Wirtschaftsfragen der freien Welt*, (Frankfurt 1957).
- 17)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本質은 올손(Olson)이 제시하고 있는 集團行動(collective action)의 원리에서 찾는 것이 경제통합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손은 먼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이 한결같이 그들의 目標을 실현시키는 데 공동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올손은 어떤 共同體의 개별 구성원이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厚生을 희생시켜 헌신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특히 경제적인 것과 결부되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어떤 組織體의 목표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원은 「무임승차(free rider)」로서의 역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해야 할 課業으로부터 자신을 회피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동으로 달성하려는 目標(public goods)는 될 수 있으면 다른 構成員에게 더 큰 부담을 줌으로써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체의 구성원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한 경우 共同的 目標(예: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M. J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 44~52.
- 18) 이에 대해서는 金瑩允, "經濟統合事例 研究와 南北韓 經濟統合 展望", 民族統一研究院『 통일연구논총』 제1권 2권 (1992) pp. 189~224 참조. 분석대상이 된 경제통합사례는 既 경제통합을 이룬 경우와 현재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경제통합이 異質體 制間이면서도 雙務的인 課題였던 경우와 同一體制間이면서도 多者間의 目標로서 대두되고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통합은 대부분 앞서 언급한 고전적 경제통합이론에 부합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경제통합이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서만 비록 제한적이나마 경제통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통합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관세동맹의 原理와 效果에 의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경제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政治 社會의인 요인들이 통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U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함께 역내 관세동맹을 실현시켰으며, 1992년 말을 시한으로 單一市場을 완성하였다. 현재 EU는 단일시장보다도 더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 12월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이라는 EU 통합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향후 EU 공동의 外交·安保政策을 통해 1996년까지는 EU 中央銀行을 창출하고, 빠르면 1997년부터 통화를 단일화하는 經濟·通貨同盟(EMU)을 이루며, 1999년 1월부터는 정치·경제·통화분야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의 체결로 EU의 경제통합은 보다 구체적이며 완성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유럽통합의 목표가 각국의 비준을 얻는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힌 경험을 가졌었다. 이의 주된 이유는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른 국가주권(sovcreignty) 상실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해 각국 정부가 얻어야 하는 比準過程에서 克明하게 드러났었다.

덴마크는 1992년 6월 2일 유럽공동체 12개국(1995년 현재 15개국으로 증가) 가운데 가장 먼저 EU 정치·경제통합에 대한 國民投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반대 50.7%, 찬성 49.3%로 나타나 條約比準에 실패한 바 있다. 덴마크 국민들이 EU통합에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EU 통합으로부터 덴마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EU 통합조약으로 미약한 자국의 工產品市場이 독일등 경제력이 강한 국가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유럽통합이 실현될 경우,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덴마크의 주권은 머지 않아 주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單一聯邦國家에 移讓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기타 스페인등 경제적 열위 국가들도 유럽의 통화를 단일화시키는 貨幣·經濟同盟이 체결될 경우 인플레이션, 금리수준, 환율 및 재정적자 규모 등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하게 제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 모았다. 중요 의사결정에 각국의 경제력에 비례한 加重投票制가 도입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등한 회원국의 거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대신, 가결내용은 초국가적 성격(supranationality)을 띠게 됨으로써 자신들을 구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EU 집행위원회나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한 새로운 관료주의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임을 우려하였다.¹⁹⁾

현재 유럽연합은 통화 단일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단일화 자체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통화에 대한 의혹과 불안 때문에 영국과 덴마크는 아예 참여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상태이며, 독일과 덴마크 등과 같은 자국 통화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단일통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²⁰⁾ 이와 같은 반대의 배경에는 경제구조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 통화 단일화를 시도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보는데 있으며, 통화의 단일화보다는 현재 유럽각국이 당면한 문제인 사회보장제도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느 형태의 통합이든, 다시 말해 점진적 또는 급진적 통합²¹⁾이든 모든 경제통합에는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통합국가간의 産業技術, 所得水準 및 經濟發展 段階의 유사성이 높을 수록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정책, 경제활동 등에서 공통점이 많을 수록 경제통합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 開放度가 비슷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의 목표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²²⁾ 그러나 同質體制나 異質體制間의 통합을 막론하고 경제통합은 독립적이거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서로

19) 金世源, “마스트리히트 합의와 유럽의 經濟 貨幣同盟”, 『經濟論集』, 제30권 제4호, p. 398.

20) 이에 따라독일은 단일통화 價値의 안정을 위해 단일통화의 「가입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첫째, 國家負債率이 국민총생산액의 60% 이하이며 둘째,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민총생산액의 3%이하이며 셋째, 인플레이션률이 3.4% 이하 등이다. 이럴 경우 加入條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북셀부르크와 독일뿐이다.

21) 경제체제면에서 주로 同質의이며 多者間에 이루어지는 통합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고 있는 반면, 동서독의 통합이나 남북예멘의 경우와 같이 경제통합이 이질체제와 雙務의인 경우의 경제통합은 급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와이너(Viner)에 의하면 관세동맹으로 인한 貿易創出效果는 발전단계가 비슷한 競爭의 經濟間에 형성된 關稅同盟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경제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에는 각국간의 상품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地理的 隣接性, 경제

병존하는 상태로 남아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서독 통합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예멘의 경제통합이나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²³⁾

넷째, 경제통합체를 형성하는 동기로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하나²⁴⁾, 경제통합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이익실현이 더 크게 부각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EU를 들 수 있는데, EU는 성립초기 경제적인 협력체로서의 비중보다는 地域安保를 위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EU의 통합은 사실상 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폐허가 되다시피한 유럽을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처절한 각성에서 출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은 유럽합중국(United Nations of Europe)의 형태를 만들어야한다는 當爲性을 주장하였는데, 그와 같은 당위성이 전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창설된 것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서 EU탄생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로써 유럽내 정치·경제·군사적인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²⁵⁾ 그 후 유럽 통합은 EU를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경제력을 신장시켜 세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킨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활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宗教的, 문화的 同質性 및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言語的 類似性 등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Stevens & Sons, London, 1950).

23)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921년 「브뤼셀 조약」(La Convention de Bruxelles)에 조인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동맹으로 인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무역, 외환 및 기타 대외경제 지표는 벨기에의 통계로 통합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재정·통화정책은 하나의 통일된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프랑과 벨기에 프랑 사이에는 고정환율이 적용되고 완전한 교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체제는 벨기에 프랑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다. 벨기에 프랑과 룩셈부르크 프랑이 양국에서 자유로이 통용되고는 있으나 룩셈부르크 프랑은 주화를 위시한 소액통화만이 유통되어 상징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 일반 거래에는 대부분 벨기에 프랑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면에 있어서도 룩셈부르크는 독립적인 발권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벨기에 중앙은행이 양국의 통화당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孫炳海, 『經濟統合論』 (서울: 法文社 1989), pp. 293~294.

24) 특히 경제통합이 다국가간에 시도되거나 유사체제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해가 아주 크게 부각되었다.

25) 單一유럽의 形成에 대한 생각과 그 實現過程에 대해서는 Richard Mayne, *Die Einheit Europas*, (München, 1963)과 Richard N. Coudenhove-Kalergi, *Die Europäische Nation*, (Stuttgart, 1953)을 참조.

IV. 經濟統合理論의 南北韓 適用

발라사식 이론은 남북한과 같은 이질체제간의 經濟統合에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이론적·경험적 한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부가할 수 있다.

첫째, 발라사식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동일한 經濟體制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南北韓과 같이 체제가 이질적인 국가간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남한의 경제체제는 의사결정의 分權化, 市場制度,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권, 통제 및 명령체제, 비경쟁, 자급자족의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이다. 남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性格과 理念이 다르며 經濟運用의 方式이 다르다. 북한은 정부가 모든 生産手段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生産, 생산물의 分配, 통화, 수입, 수출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의 특화에 따른 시장과 시장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발라사식 경제통합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둘째, 고전적 경제통합이론은 통합주체의 主權問題를 무시한 이론이기 때문에 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질체제간의 통합에는 적용의 限界性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격심한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가 발라사식 경제통합을 저해한다. 경제통합은 경제활동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 등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대등한 경우, 경제통합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으나, 經濟規模面에서 월등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통합은 경제활동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경쟁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경제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에는 경쟁의 不均衡 관계가 이루어져, 경제력 열위국가의 경제력 우위국가에 대한 從屬關係가 성립하기 쉽다. 따라서 실질적 경제통합이 촉진되기 어렵다.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경제규모면에서 현재 18배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9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의 대외거래는 1991년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거래규모가 급격

히 줄어들었다. 1994년에도 이와 같은 위축현상은 지속되어 무역규모는 1992년과 비슷한 21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남한 대비 1/94 수준에 그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는 남북한간 경제활동의 연계를 방해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북한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한에의 경제적인 從屬을 우려하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큰 이득을 가질 수 없어 經濟活動이 크게 활성화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통한 합의에 도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일방의 노력만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대적인 과정이며, 경제교류와 협력이 필연적인 媒介體로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질체제간의 교류협력은 먼저 당국자간의 政治的 決定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쌍방간 합의·협약이 이루어지고, 합의사항의 준수여부가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쌍방간의 제도적 협약은 逆으로 경제교류와 協力の 高度化가 전제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정치적인 결정과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한편의 문제가 풀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양쪽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經濟統合이 추진되기 어렵다.

V. 經濟統合理論의 새로운 接近

1. 經濟統合의 地域經濟學的 接近의 當爲性

이상의 고찰에서 기존의 경제통합이론으로는 경제통합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남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론은 다른 시각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통합의 이론적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를 地域經濟學的 바탕에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모든 경제활동이 지역적인 空間을 초월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시간과 장소는 현실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시간은 非可逆的인 과정으로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즉, 과거와 미래의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6)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5).

공간은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은 그것이 행해지는 시간과 지역적인 空間을 초월할 수 없다. 모든 경제활동이 지역적인 공간과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經濟地域은 경제활동에 의해 변화·발전된다.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인 지역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지역은 경제활동에 의해 形象化되며, 경제활동은 경제지역이라는 영역 위에서 전개되고 具體化된다. 따라서 모든 경제현상의 분석에는 시간적인 요소 이외에 공간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고찰·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⁷⁾ 그러나 일반 경제학에서 시간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요소가 크게 외면 당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경제이론에서도 輸送에 따른 비용발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의 개념은 배격되고 있다. Isard는 이를 “공간 제외의 신비지대(wonderland of no dimensions)”라고 부르고 있다.²⁸⁾

전통 경제학이 지역적인 “공간”을 배제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함으로써 理論的 모델이 현저하게 단순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經濟理論과 政策的 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²⁹⁾

2. 經濟地域의 概念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인 요소에는 기후, 지형, 토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歷史와 言語 및 宗教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으며, 인구, 노동, 산업, 교통, 거주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도 있다. 이와 같

27) Ritschl, H., Aufgabe und Methode der Standortleh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LIII, 1941 I, Schrifttum, pp. 115-125.

28) Isard W., *Location and Space-Economy. A General Theory Relating to Industrial Location, Market Areas, Land Use, Trade and Urban Structure*, (Cambridge, London 1956) Paperback 1972, p. 25.

29) 일반적 균형이론에서 지역적인 공간이 배제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간에 대한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경제모델이 단순화된 조건하에서만 현실을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역적인 경계는 國家의인 경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설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政治·制度的인 영역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 지역적인 경제현상 분석을 위해서는 거의 작성되지 않고 있다. 넷째, 經濟地域과 地域發展은 일반적인 발전논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경제학에서는 소홀히 취급하거나 전혀 취급하지 않는 規模의 經濟, 輸送費, 土地, 勞動 등의 경제적인 요소와 住居, 教育, 餘暇, 交通, 情報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은 다시 지역공간을 변화·발전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경제지역은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 예를 들어 地下資源의 개발과 교통·통신의 발전, 시장의 확대 등과 生産費 인하를 지향한 생산구조 및 규모경제의 실현, 재화와 용역의 공급, 공업생산과 서비스부문의 연결 등을 비롯하여 교육, 위생, 기술교육의 수요 등에 의해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낸다.³⁰⁾

한편, 경제지역은 다시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일반지역과 차별성을 띠게 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적인 질(quality)과 형상(form)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經濟地域”은 어느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현저하게 높은 경제적인 결속도를 나타냄으로써 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예를 들어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과 같은 대도시나 工業地域을 일컬을 수 있으며, 독일의 루르공업지대와 같이 여러 나라의 경계를 포함하는 지역³²⁾일 수도 있다. 또한 Predöhl의 개념정립에 따라서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등을 지칭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지역이 하나의 국가지역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확대될 수 있는 개념으로,³³⁾ 상황에 따라 경제지역과 국가지역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지역은 인위적인 경계개념을 가진 것이 아닌 시장과 같이 經濟力이 미치는 자연적인 경계를 지향하여 적용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³⁴⁾

경제지역에 대한 연구는 ① 경제활동의 지역적 분배에 대한 결정 ② 경제지역의 형성과 발전 형태 ③ 經濟地域間의 관계 ④ 地域經濟政策 등과 같은 地域

3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mper, A., 앞의 책, pp. 113~137 참조.

31) Weigmann, H. “Ideen zu einer Theorie der Raumwirtschaft. Ein Versuch zur Begründung einer realistischen Wirtschaftstheori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34, 1931, p. 16.

32)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다국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만강지역은 향후 개발이 완료될 경우 동북아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33) 이를 “세계경제지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34) 이와 관련하여 Weber는 ‘국민경제’라는 단어 자체를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 그는 ‘사회경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경제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경제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Weber, A., *Volkswirtschaftslehre. Eine Einführung*, 4. Publ. Vol. II (München-Leipzig 1932) p. 4.

經濟學的 연구를 기본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의 지역적인 분배 즉, 경제지역형성이 경제통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소규모 單一經濟地域과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微視的 地域經濟研究를 거쳐 국제경제와 이질체제간의 경제에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지역형성은 문헌상 集積(agglomeration), 集中(concentration), 極化(polarization), 都市化(urbanization)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財貨와 用役의 購買 및 販賣와 관련된 경제활동력의 확대·팽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정도가 긴밀해지면 질수록,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의 잠재력이 높을 수록 경제지역은 더 크게 확대되며, 더 분명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경제지역형성은 일반적으로 ① 생산구조의 擴大와 集中 ② 생산의 集中化와 專門化 ③ 하청기업 생산의 확대·유인 ④ 工業化 정도에 비례한 서비스업의 확대·발전 ⑤ 기술·사회적 간접시설의 확충 ⑥ 産業部門間的 긴밀도 및 상호의존성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지역형성을 經濟構造의 變化發展과 연결시켜 고찰하면³⁵⁾, 우선 농업이 주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계에서 기술진보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업부문이 발전하고, 공업부문의 발전이 다시 서비스분야가 확대·연결됨으로써 지역집중(regional agglomeration)이 이루어진다. 공업분야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섬유산업을 필두로 광업과 연결된 철강공업의 발달 후, 전자 및 에너지관련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지역형성과 관련된 연구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Perroux의 “Growth pole”이론이다.³⁶⁾ 분야별로 살펴볼 경우 農業分野에서는 v. Thünen의 고립국(Der Isolierte Staat) 모델에 의해 입지구조와 생산구조³⁷⁾가 연구되었으며, 工業分野에서는 Lösch(최대수요이론: interne & externe Ersparis-

35) Fourastié, T., *Die große Hoffnung des 20. Jahrhunderts* (French: *Le grand Espoir du XXieme Siecle*) Paris 1947, Köln-Deuty 1954. p. 32ff.

36) Perroux, F., Economic Space: “Theory and Appli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IV, 1950, pp. 89~104.

37) v. Thünen, J. H.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1st Publication 1842) (Stuttgart, Fischer Verlag 1966).

se)³⁸⁾ 및 Weber³⁹⁾ 등에 의해 고찰되었다. 서비스업분야에서는 Christaller의 중심지(“zentraler Orte”) 이론⁴⁰⁾을 비롯하여 v. Böventer,⁴¹⁾ Isard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對外交易分野에서는 Pred hl의 경제발전사에 입각한 “Gravitation”이론⁴²⁾과 Lemper의 공업집결지론(Industrie-Komplex) 등이 있다.

범 국민경제간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세계경제지역형성⁴³⁾은 經濟發展史의 측면에서 그 고찰이 가능한데 먼저 국민경제로서의 “經濟核地帶(economic core area)”가 등장한 후⁴⁴⁾ 경제핵지대와 이를 제외한 타지역간의 교역활동에 따른 발전의 역동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써 파악되고 있다.

경제핵지대는 ① 농업의 근대화와 함께 ② 철강공업의 발전이 현저하고 ③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④ 공산품 위주의 교역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⑤ 대외교역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이 발전과정상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핵지대와 이를 제외한 타지역간의 교역활동은 경제력이 상이한 국가간의 相互 交易活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제력이 우세한 국가의 경제력 劣位國家에 대한 경제적 구축현상(penetration) 즉, 周邊化(Peripherisierung) 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는 重商主義, 植民地主義, 帝國主義 등을 통해 나타났으며 근대에는 경제 강대국의 자유무역 논리의 옹호, 대외시장의 개방강요 및 다국적기업의 제3세계 국가에서의 활동 등

38) Lösch, A., *Die rä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 Jena 1940.

39) Weber, A., *Über den Standort der Industrien* (Tübingen 1909).

40) Christaller, W., *Die zentralen Orte in Sueddeutschland, eine ökonomisch-geographische Untersuchung über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arbeitung und Entwicklung der Siedlung mit städtischen Funktionen*, 1. Aufl., Jena 1933.

41) Böventer, E. v., *Standortentscheidung und Raumstruktur* (Hannover 1979).

42) Predöhl, A., *Außenwirtschaft, Weltwirtschaft, Handelspolitik und Währungspolitik*, Grundriß der Sozialwissenschaft, Bd. 17, Göttingen 1949.

43) 세계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李大根, 世界經濟論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서울: 까치 1993) pp. 21~34 참조할 것.

44) “경제핵지대”로 등장한 국가로는 산업혁명 이전 유럽의 스웨덴과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英國을 지칭할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에서 경제핵지대는 차츰 유럽 대륙쪽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경제지역으로 성장하였다. 北美地域에서는美國을 중심으로 캐나다가 합류하는 형태로 북미 경제핵지역이 탄생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日本이明治維新의 성공과 함께 경제핵지대로 浮上하였다.

45) Senghaas, D.,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Frankfurt a. M.: edition suhrkamp 1980) p. 28; Röpke, J., “Der Einfluß des Welthandels au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Schiemenz, B. (ed.), *Weltwirtschaftsordnung und Wirtschaftswissenschaft*, (Stuttgart /New York, 1978), pp. 42~43.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구축(주변화)현상은 경제력 열위의 국가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경제적 열세를 만회, 追擊發展(catching up)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잘못 대응함으로써 경제적 沒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失敗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는 경제열위국가가 취하는 발전전략과 주어진 여건에의 社會適應力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⁴⁶⁾

추격발전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은 ① 경제 및 사회구조의 變革과 改善 ② 농업개혁과 국내경제의 活性化 ③ 경제발전을 위한 기관 신설 및 재정능력 확충 ④ 技術革新 ⑤ 輸出振興과 輸入代替戰略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었다. 독일을 위시한 프랑스, 미국과 일본 및 아시아 신흥개발국(A-NIES) 등은 위의 발전전략을 통해 추격발전에 성공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추격발전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핵지대의 周邊化에 대한 인접 경제열위국가의 追擊發展의 성공을 통해 지역경제상의 질적 평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간의 경제지역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유럽경제공동체(EEC) → 유럽공동체(EC) →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여온 서유럽지역은 이의 전형적인 경제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VI. 結論：南北韓 經濟統合과 經濟地域形成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기존의 이론이 경제통합의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南北韓과 같은 이질 체제간의 경제통합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국가연합이 창설 이후 비교적 장기간의 歷史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에게 이익이 되는 關稅同盟이 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경제지역으로 존재할 수 있

46) 이는 토인비식 “도전과 응전”의 세계문화 생성·소멸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4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Young Yoon Kim, *Entstehung eines eigenen Wirtschaftsraumes: Eine raumwirtschaftliche Untersuch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siatischen Pazifikraumes*, Bremen Univ. Dissertation 1989 참조.

는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制度的 결정에 따른 段階別 접근시각에서 벗어나 지역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간 이루어질 경제통합도 서로 이질적인 경제 및 사회체제간의 통합이자, 쌍방간의 통합으로 서유럽 국가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처럼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부합하여 이루어질 可能性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經濟力과 發展程度가 서로 크게 다른 경제주체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위해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마련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전에 경제수준의 평준화와 함께 정치적인 여건이 먼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남북간에는 경제지역 형성원리에 기초한 經濟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향은 북한지역의 농업과 섬유공업 및 철강공업의 발전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의 후진적 상황에서 경제지역형성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leading industry)은 농업을 시발점으로 한 섬유와 철강산업이다. 특히 지역경제형성의 求心的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강산업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형성에 기초한 장기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 남북한이 아주 초보적인 경제공동체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한 대화의 진전에 의해 점진적인 통합의 바탕을 마련해 나가다가 정치적인 轉機가 마련되면서부터 공동체 형성의 질적인 심화과정을 수반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지역경제형성에 기초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政治的인 論理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적 경제통합을 지향한 대북 경제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북 경협을 포괄하는 정치적 상위개념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민족'을 단일 경제지역형성을 위한 이념으로 설정하여 대북한 交流・協力を 증진시키는 일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세원. “남북합의서의 남북간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실천과제.”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1회 통일학술세미나. 『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와 실천적 과제』. (1992).
2. _____. “마스트리히트 합의와 유럽의 經濟・貨幣同盟.” 『經濟論集』 제30권 제4호, p. 398.
3. 金瑩允. “經濟統合事例 研究와 南北韓 經濟統合 展望.” 民族統一研究院. 『통일연구논총』 제1권 2권 (1992).
4. 孫炳海. 『經濟統合論』. 서울: 法文社 1989.
5. _____. 『經濟統合論:理論과 實際』. 서울: 법문사, 1990.
6. 李大根. 『世界經濟論: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서울: 까치, 1993.
7.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 개발 세미나 1991. 12.
8. _____.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9. _____. “남북한 경제교류 실천방안.”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권 제13호) 1992년 봄.
10. _____.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1.
11. 李鍾元. “統一에 對備한 韓國經濟의 進路模索.” 成均館大學校 韓國産業研究所. 『한국경제』 제21권 제1호. 1994. 9.
12.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5.
13.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Fourth Impression, 1973.
14. Borchert, M. *Außenwirtschaftslehre - Theorie und Politik*, 3ed. Wiesbaden: Gabler 1987.
15. Böventer, E. v. *Standortentscheidung und Raumstruktur*. Hannover, 1979.
16. Chrisaller, W. *Die zentralen Orte in Sueddeutschland, eine ökonomisch-geographische Untersuchung über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a-*

- rbeitung und Entwicklung der Siedlung mit städtischen Funktionen*, 1. Aufl., Jena, 1933.
17. Fourastié, T., *Die große Hoffnung des 20. Jahrhunderts*. French: *Le grand Espoir du XXIeme Siecle*. Paris 1947.
 18. Haberler, G. "Defects in the Concept of Regionalism to Solve Trading Problems." *Indian Journal of Economics*. (July 1957); *Der internationale Handel: Theorie der weltwirtschaftlichen Zusammenhänge sowie Darstellung und Analyse der Aussenhandelspolitik*. New York: Berlin/Heidelberg, 1970.
 19. Heckscher, E.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L. A. Metzker, ed.,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hiladelphia 1949.
 20. Kim, Young Yoon. *Entstehung eines eigenen Wirtschaftsraumes: Eine raumwirtschaftliche Untersuch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siatischen Pazifikraumes*. Bremen Univ: Dissertation, 1989.
 21. Lemper, A. *Handel in einer dynamischen Weltwirtschaft*. München: Weltforum Verlag, 1974.
 22. Lösch, A. *Die rä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 Jena, 1940.
 23. Mayne, R. *Die Einheit Europas*. München, 1963.
 24. Meade, J. 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55.
 25. Ohlin, B.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Economic Studies*, Vol. 39. New York: Cambridge, 1967.
 26. Olson, M. J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7. Perroux, F. Economic Space: "Theory and Appli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IV, 1950.
 28. Predöhl, A. *Außenwirtschaft, Weltwirtschaft, Handelspolitik und Währungspolitik*, Grundriß der Sozialwissenschaft, Bd. 17. Göttingen, 1949.

29. _____. "Europäische Integration." in HDSW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en*) Göttingen: 1961.
30.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ondon: First Publication, 1817.
31. Richard N., *Die Europäische Nation*. Stuttgart, 1953.
32. Ritschl, H., Aufgabe und Methode der Standortleh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LIII, 1941 I, Schrifttum.
33. Röpke, J. "Der Einfluß des Welthandels au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Schiemenz, B. (ed.), *Weltwirtschaftsordnung und Wirtschaftswissenschaft*. New York: Stuttgart, 1978.
34. Röpke, W.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in E. Beckerath, /F. E. Meyer /A. Müller-Armack(ed.), *Wirtschaftsfragen der freien Welt*. (Frankfurt, 1957).
35. Senghaas, D.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Frankfurt a. M., 1980.
36. _____. *Weltwirtschaftsordnung und Entwicklungspolitik: Plädoyer für Dissoziation*. Frankfurt a. M., 1977.
37. Thünen, J. H. von.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1st Publication 1842) Stuttgart, Fischer Verlag 1966.
38.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 London: Stevens & Sons, 1950.
39. Isard, W. *Location and Space-Economy, A General Theory Relating to Industrial Location, Market Areas, Land Use, Trade and Urban Structure*. Cambridge: London, 1956.
40. Weber, A., *Volkswirtschaftslehre. Eine Einführung*, 4. Publ. Vol. II München-Leipzig, 1932.
41. Weber, A. *Über den Standort der Industrien*. Tübingen, 1909.
42. Weigmann, H. "Ideen zu einer Theorie der Raumwirtschaft. Ein Versuch zur Begründung einer realistischen Wirtschaftstheori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34, 1931.